

평화나눔의 시선

2026.08.07. | 제26-04호

적대를 넘어, 평화공존을 위한 가톨릭교회의 역할

‘두 국가론’의 한반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2023년 1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남북관계를 평가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인 두 교전국 관계”로 선언했습니다. 80년 가까이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서로를 규정해 온 남과 북의 관계사를 부정하는, ‘두 국가’ 선언이었습니 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국제 정세의 전환 속에서, 북한은 한반도 전체 통합과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핵을 보유한 주권국 가로서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한편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와 관련해서도 좀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 습니다. 2026년 2월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 보도에서는 ‘전쟁 중 두 교전국 관계’라는 표현이 사라졌고,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은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서도 남한을 ‘적대적’ 국 가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적대의 수사가 일정하게 자제되고 있는 측면 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 화해의 신호는 아닙니다. 2026년 6월 한-EU 공동성명 이 북한의 핵보유와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자, 북한 외무성은 한국의 평화공존 정책이 “가면 을 내던졌다”며 이번 대결 선언으로 “남북 사이에 평화공존은 있을 수 없음을 입증했다”고 격 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일관되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주권 인정’이며, 이 요구 를 둘러싼 남북의 언어는 여전히 충돌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정권 초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전단 살포 자제 유도 등 선제적 긴장완화 조치를 진행했고, 2025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라는 대북정책 3원칙이 천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치는 물론 정부 안에서도 ‘평화적 두 국가론’과 ‘특수관계 유지론’이 엇갈리고, 한미연합훈련·비핵화·북한의 국가 인정·통일 미래상을 둘러싼 이견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평화공존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정의와 논리체계, 전략적 우선순위와 정책적 로드맵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반도는 북한의 ‘두 국가’ 담론과 남한의 ‘평화공존’ 담론이 경쟁하고,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한반도의 미래상을 둘러싼 입장이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갈라진 물음들을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함께 이야기할 것인가.

함께 듣고 함께 식별하기 — 공론화, 그리고 시노드 정신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인식 지형은 이미 크게 움직여 왔습니다. 2025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서 ‘북한도 하나의 국가’라는 데 찬성한 응답은 54.5%였고, 같은 해 통일부 의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64.6%에 달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공존이 통일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은 79.4%였습니다. 한편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 조사에서 20대에서는 ‘통일 불필요’ 응답이 50.7%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통일과 민족을 자명한 가치로 여겨 온 세대와, 전쟁 없는 병존, 분립을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세대가 한 사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갈라진 의견의 분포를 보여줄 뿐, 그 간격을 좁혀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추첨으로 선발된 평범한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공론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사람은 충분히 듣고 충분히 말할 기회를 가질 때, 처음의 생각이 깊어지고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교회에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한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의 여정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최종 문서』가 말하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란 함께 모여 대화하고 식별하고 결정하는 ‘관계적인 교회’를 향한 길입니다. 세례받은 모든 이에게 주어진 ‘신앙 감각’(sensus fidei)이 서로에 대한 경청 속에서 ‘신자들의 합의’로 무르익어 가는 과정, 갈등을 감추거나 서둘러 타협하지 않으면서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공동선을 향한 폭넓은 합의에 이르는 과정 – 이것이 시노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이 공론화라는 민주주의의 언어로 부르는 것을, 교회는 이미 경청과 식별, 친교와 참여와 사명이란 신앙의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문서』는 시노드 교회야말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해답을 찾으며 공동선을 이루어 가는 장이자 방식이라고 선언하며, “대화의 문화”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로 채택하자고 약속합니다.

한반도 문제야말로 이렇게 함께 듣고 함께 식별하는 과정이 절실한 의제입니다. 우리 헌법은 영토 조항(제3조)과 평화통일 조항(제4조)을 통해 통일을 전제한 법질서를 이루고 있는데, 한반도의 ‘사실상 두 국가’ 현실과 이 헌법적 틀 사이의 긴장은 결국 주권자인 시민들의 깊은 숙고와 합의 없이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대북정책과 한반도 전략이 정권 교체마다 요동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특정 정부나 관료집단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포함하는 공동체 전체가 참여해 만드는 중장기 미래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인가에서 시작해, 긴 호흡으로 횡수를 거듭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합을 향한 대안들에 대한 폭넓은 합의를 키워가는 것 – 이 여정에 교회가 먼저 응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앞에 놓인 물음들 — 함께 식별해야 할 쟁점

그렇다면 이 공론의 장에서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그리고 교회는 왜, 어떻게 이 물음에 함께해야 할까요. 한반도 문제의 쟁점은 크게 네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정(recognition)의 문제입니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권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이는 인식론적 인정, 정치적 인정, 법적 인정 등 여러 층위를 지닌 물음입니다. 상대

가 거기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과, 상호적 관계를 가지는 일과, 상대의 존재와 체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일은 같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분은 교회에 낯설지 않습니다. 죄인을 단죄하기 전에 먼저 한 인간으로 마주하라는 복음의 가르침은, 국가 간 관계에서도 ‘적’이라는 규정 이전에 상대를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태도의 원형이 됩니다.

둘째, 법과 제도의 문제입니다. 헌법의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1945년 이래 인권 탄압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국가보안법, 탈냉전기 한국의 역대 정부의 민족 공동체통일방안은 폐기·수정되어야 하는가. 이는 결국 헌법 개정 절차까지 내다보는 질문이며, 그렇기에 소수 전문가의 논쟁이 아닌 시민적 숙의를 요구합니다.

셋째, 핵과 평화체제의 문제입니다.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 선언한 북한을 상대로, 한반도의 미래에서 핵전쟁의 아마겟돈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한국 전쟁 이래 지속되어온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어 영구적으로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경로는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반도 내외 평화공존을 위한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군축·비핵화 의제를 어떤 조건에서, 어떤 순서로, 어떻게 엮을 것인가는 공론화의 핵심 쟁점입니다.

넷째, 언어와 일상의 문제입니다. ‘괴뢰’, ‘주적’, ‘쓰레기’ 같은 적대의 언어가 오가는 동안, 분단은 제도이기 이전에 우리의 말과 마음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평화공존은 정부 간 합의문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적대의 언어를 내려놓고 서로 다른 미래 전망을 경청하는 사회적 변화, 즉 ‘일상의 평화구축’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이 네 갈래 쟁점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정답’이 미리 주어져 있지 않으며, 서로 다른 규범적 미래상 – 통일, 국가연합, 평화적 두 국가, 그 사이의 무수한 변주 – 이 경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여기에 교회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특정한 정치적 해법의 대변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회구하는 한반도의 규범적 미래의 복수성을 존중하면서 적대와 갈등의 언어를 넘어서는 가치와 규범을 확장하는 행위자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교황청이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에서 보여준 도덕적 중재의 전통, 그리고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이의 존엄을 옹호해 온 보편 교회의 역사가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노드 정신으로 걷는 교회 — 우리 논의의 방향

이제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방향을 제안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먼저, 한반도 문제를 ‘성령 안에서의 대화’로 다루는 길입니다. 『최종 문서』는 교회적 식별의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충분한 정보와 준비, 기도와 말씀 경청의 시간,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공동선의 추구, 서로의 의견에 대한 존중과 경청, 그리고 갈등을 감추거나 얼버무리지 않으면서 이르는 폭넓은 합의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본당과 교구, 단체들이 한반도 문제를 함께 숙의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신자들이 둘러앉아,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서로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숙고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이 깊어지고 재구성되는 경험을 실제로 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실험하는 공론화의 교회적 실천이자, ‘함께 걷는 교회’의 영성 그 자체입니다.

둘째,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먼저 듣는 길입니다. 『최종 문서』는 젊은이들이 형제애와 나눔의 가치에 민감하며, ‘일상에서 함께 나아가자’고 교회에 요청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절반을 넘어선 2030세대를 ‘통일 의식이 부족한 세대’로 접근하는 방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리는 한반도의 미래 — 전쟁 없는 일상, 국경을 넘는 교류, 존엄이 지켜지는 공동체 — 를 있는 그대로 경청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2027년 서울 WYD(세계청년대회)는 이를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분단의 땅에 모이는 이 자리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젊은 세대의 미래 전망을 듣고 모으는 경청의 장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대의 언어를 내려놓는 ‘관계적 회심’의 길입니다. 시노드는 관계적 회심이 없는 시노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무기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게 하는 평화”를 향해 나아갈 것을 호소하셨고, 인공지능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간 존엄의 가치를 새 회칙을 통해 일깨우셨습니다. 무기를 내려놓는 일은 국가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이웃을 배제하고 낙인찍는 말과 행동 역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무기입니다. 함께 듣고 함께 식별하는 일은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하는 회심의 과정입니다.

끝으로, 상호 인정에 대한 교회의 평화신학적 확신을 증언하는 길입니다. 북한을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최종적으로 답하는 것은 시민과 정치공동체의 몫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숙의에 앞서, 더 깊은 차원의 인정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상대를 부정하거나 소멸시키는 데서가 아니라, 상대가 거기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대화의 상대방으로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대해 온 상대라도 그 땅에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존엄은 어떤 체제나 국정보다 앞선다는 것 – 이것이 교회가 분단과 갈등의 역사 내내 지켜온 확신입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는 두 국가가 마주 선 이 땅에서, 먼저 경청하고 먼저 인정하며 함께 걷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자체가,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국가론’의 시대는 우리에게 익숙한 답을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나 답이 사라진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물음의 자리, 곧 함께 식별하는 자리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마태 5,9). 그 평화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이들이 함께 물음을 견디며 걸어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여정의 너른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